



# HanSun Policy Brief

Hansun Foundation

2010. 12. 02

## 육/해/공 전력증강의 우선순위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금요정책세미나(2010.11.26) 발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hansun.org](http://www.hansun.org)



## - 차 례 -

### I. 북한 위협의 평가

#### 1. 전통적 위협

#### 2. 비전통적 위협

### II. 육/해/공 전력증강의 우선순위

### III. 전력증강 예산의 효율적 배분

북한은 지난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격침한 데 이어 최근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군사시설과 민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으로 나누어 평가해보고, 북한의 군사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전력증강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것이 되도록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지적한다.

### I. 북한 위협의 평가

#### 1. 전통적 위협

북한은 119만여명의 정규군과 탱크 3,900여대, 장갑차 2,100여대, 대포 1만 3,000여문, 전투함정 490여척(잠수함정 70여척 포함), 전투임무기 840여대 등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육군은 1만문이 넘는 전체 포병전력 가운데 45%를 휴전선 전방지대에 배치하였다. 600문의 170mm 자주포 및 400문의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50~60km이상으로 시간당 약 3만발 이상의 포격이 가능하다.

북한 해군은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전방해역을 중심으로 연안전투 능력을 중점 강화하고 있고, 총 70여척 규모의 잠수함정을 보유

하고 있다. 장산곶, 웅진반도, 해주, 사곶, 등산곶 등지에 배치되고 있는 사거리 10~20km 이상의 해안포와 사거리 90km 이상의 HY-2 ‘실크웜’ 지대함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대함 화력 등은 전방해역에서 한국 군함들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 및 교란하고, 유사시에는 한국 해군의 인적·물적 피해를 극대화시켜 정치·심리적인 충격을 강요할 수 있다.

#### 2. 비전통적 위협

북한은 지난 1961년 김일성이 주창한 ‘화학화선언’을 계기로 화학무기의 개발, 확보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린, VX, 포스젠 등 신경가스화 질식작용제, 수포·혈액작용제를 포함한 대략 16가지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이며, 비축규모는 2,500~5,000톤 내외로 미국, 러시아의 뒤를 잇는 세계 3위 수준이다.

화학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착/발사수단은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발사대 36대), 사거리 1,300km의 ‘로동 1호’(발사대 27대)이며, 발사 3~5분만에 휴전선 이남의 한국 영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일본과 태평양 일대의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사거리 2,000km 이상의 ‘대포동’ 1·2호, ‘무수단’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및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① 군단급인 육군 경보병 교도지도국 소속의 항공육전(공수)여단 2~3개와 경보병 및 저격여단 6개, ② 육군의 각 정규군단 직속인 경보병여단 9~11개, ③ 해군 소속의 해상저격여단 2개, 그리고 ④ 공군 소속의 공군저격여단 3개 등이다. 이들 부대는 한국의 주요 기간시설 파괴, 군사시설 습격, 요인암살,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침투수단은 300여대의 AN-2 ‘콜트’ 소형수송기, 70여척 잠수정, 22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 20개 내외로 추정되는 휴전선 전방지대의 땅굴

등이다.

북한은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선발, 사이버전 담당 요원으로 양성, 운용 중이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 자동화국', 경찰국 산하의 '기술정찰조(일명 110호 연구소)' 등에서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전부대, 사이버전을 통해 유사시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전쟁 초반부터 한국의 전쟁수행 체계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무너뜨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 II. 육/해/공 전력증강의 우선순위

북한은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침투 및 도발, 비정규전 등을 위한 다양한 비전통·비대칭적 위협 능력까지 보유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합적 군사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변 강대국 및 외부 불특정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1)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북한의 기습, 국지적인 침투 및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의 강화이다. 북한이 휴전선 전방지역이나 해·공역, 혹은 후방에서 소규모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조기에 식별 및 탐지, 추적하고, 신속하게 제압, 격퇴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위기의 불필요한 확대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전방 전투부대들의 정보수집 자산, 대(對)기동전력(예: 지뢰살포 장비), 포병을 비롯

한 화력지원 능력을 확충하고,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서의 신속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 기동수단의 전력수준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군은 지대함 화력과 잠수함정을 앞세우는 북한의 연안전투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해안포, 지대함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 가능하며, 이들의 배치지점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함대지 정밀유도무기의 개발 및 전력화가 필요하다. 대잠(對潛) 전력은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제기된 주력 전투함정의 탐지장비 개량, 서해 전방해역에서의 수중 감시장비 설치 외에도 대잠 작전 수행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상초계기, 헬기 등의 항공전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한반도 전체와 주변지역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정보수집,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찰위성이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그리고 이들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군함 및 전폭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세 번째 우선순위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점과 범위를 대상으로 주변 강대국의 해·공군력 침범을 차단/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① 마하 2 이상의 비행속도로 적 군함의 함대공 요격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② 2주일 이상의 지속적인 수중 잠항(潛航)이 가능한 공기불요 추진장치(AIP) 탑재 잠수함, ③ 다목적의 임무수행 능력과 고(高)기동성, 일정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네 번째 우선순위는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의

원거리 기동'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이익이 위협받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거나,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인도주의 목적(예: 평화유지 활동, 재난 구호)의 군사력 동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기동전단/함대와 이를 구성하는 중대형 수상전투함 및 수송함, 공군의 장거리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III. 전력증강 예산의 효율적 배분

육/해/공 전력증강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우선 순위에 입각해 편성해야지, 과거의 예산 점유율을 기준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원 부족을 빌미로 단위전력별 예산규모가 큰 전력증강사업, 특히 해군과 공군의 사업들이 주로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전략되고 있는 현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해군의 경우 차기구축함(KDX-II), 전투실험분 석체계, 소형잠수함, 대잠초계함, ATS 수상함 구조함 등의 신규 사업이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 공군의 경우 미반영 신규 사업으로는 F-X(차기전투기 3차),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공중급유기(KC-X) 등을 들 수 있고, 감액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사업을 들 수 있다.

2011년 정부예산에서, '북한의 기습, 국지적인 침투 및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하게 전력을 보완해야 할 공군 및 해군의 예산증가율이 낮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군의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긴급히 요구한 소해함 2차사업, 소해헬기 등 핵심사업 대부분이 미 반영되어 있고, 공군의 경우 북한 기습공격 대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F-X, M-SAM, KC-X, E-737 등의 많은 사업이 미 반영되어 있다.

국회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해·공군의 전력증강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군의 경우, 천

안함 폭침사건 이후 전방해역 증강배치, 소말리아 파병 등으로 부족한 KDX-II급 전력, 70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정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 그리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이후,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아 해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대특작부대작전 등의 해상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 전력공백 방지와 합동성 강화차원의 핵심전력인 F-X(차기전투기 3차),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적 공중위협 대비 신속 대응전력인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지상레이더의 탐지범위 제한극복과 원거리 투사전력에 대한 MCRC의 지휘통제 능력 확장에 필수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감액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긴급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필자 | 김종하, Ph.D.

-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국방전략대학원 국방획득관리학과 주임교수(現)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무기체계 자문위원(現)
- 기획재정부 국방예산편성 자문위원(現)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합참분과위 자문위원(現)
- 공군본부 정책발전 자문위원(現)
- 육군본부 전력정책 자문위원/육군본부  
군수정책 자문위원(現)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 자문위원(現)